

예산 · 재정정책 정보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 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Tel : 635-5202)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목 차

I. 경제분야(1건)

1. 충남경제 - 2022년 12월 충남 경제동향 [기경위] 1

II. 재정분야(3건)

1.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기경위] 3
2.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분권 방향 [기경위] 4
3.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정비에 따른 세입 영향 및 시사점 [기경위] ... 7

III. 정책분야(10건)

1. 2023년 10대 농정아슈 및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현안 [농수위] 8
2. 광역철도 및 대중교통 기술 동향 [건소위] 11
3.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 보도자료 [교육위] 16
4. 충남교육청 2023년 미래교육 추진계획 발표 [교육위] 20
5. 교육부 2023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 [교육위] 23
6. 지역인구 감소시대, 지역과 대학의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 [기경위] 27
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 [기경위] 29
8.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복환위] 32
9. 지방자치단체 부패실태 및 제도적 취약요인 분석 [행문위] 35
10. 고향사랑기부제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 [행문위] 37

IV. 법률 제·개정(1건)

1.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39

I. 경제분야(1건)

1. 충남경제 - 2022년 12월 충남 경제동향

- (경기 종합)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소비 감소세,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와 더불어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감소하며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충남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하락, 현재 경기는 둔화추세 지속
 - 자본재 수입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투자 위축 및 지연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수요둔화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화학산업의 위축, 반도체 경기둔화 요인 등으로 인해 향후 경기 역시 하강국면을 이어가는 모습
- (기업 경기) 도내 제조기업은 채산성, 신규수주, 업황 부문을 중심으로 실적 및 전망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 더불어 경기 악화 판단(전망)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는 비제조업 역시 인력사정, 자금사정, 업황 등을 중심으로 위축
- (산업 생산) 충남 광공업(제조업) 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하며 반등
 -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생산은 내수 중심의 생산이 본격화되며 완연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 반면, 전자부품(전방산업 위축, 산업재편, 수요부진), 1차금속(노조파업), 화학제품(기저효과 잔존) 생산은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 (수출입) 11월 충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5.0% 감소한 74억 6,100만 불로 5개월 연속 감소, 감소폭 또한 전월대비 확대
 -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변동성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여전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러-우 전쟁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 특히 충남은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며 다소 부진한 상황(자동차-내수용 생산으로의 전환, 전자부품-전방산업 위축, 수요부진, 경기침체 등)
 -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한 38억 5,800만 불로, 원유·석탄·석유

- 제품·천연가스·정밀화학원료 등 에너지·원자재(광물성연료) 중심의 수입 구조
- 당월 충남 무역수지는 흑자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규모 자체는 전년동월 대비 -45.0% 가량 감소
- (고용) 충남 노동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고용률 등 주요지표 양호한 흐름 지속
- 다만, 고물가, 금리 인상, 수출 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되며 향후 고용시장 회복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
- (물가) 11월 충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로 전년동월대비 5.5% 상승,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안정세로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연말연초 가격 조정 및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여파 등 대내외 리스크 관련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필요
- (소비) 충남 지역 내 소비활동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 지난달까지 월별 추이는 3개월 연속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당월 다시금 감소로 전환되며 내수 회복 속도가 소폭 둔화된 모습

출처 : 충남연구원(2023. 1.)

II. 재정분야(3건)

1.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은 자산시장의 거품과 인플레이션을 초래 하였음

- 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영끌”을 통한 주택 구입 현상이 나타났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시행되었음
- 그 결과 현재는 인플레이션 상승 폭이 둔화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자산가격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자산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음

○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맞게 종합부동산세도 정상화하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짐

- 지난 3년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수요 억제와 자산 불균형에 따른 수직적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
-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조세저항이 커졌고,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부동산가격 조정시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추진되었음
- 금번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높아진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개정됨
- 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중과세 세율을 완화하도록 개정됨
-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이 감경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부터 논의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완화는 부동산경기 변화에 맞게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경기변화에 맞는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강화 조치가 부동산시장의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수요가 급감한 “거래 절벽”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임

출처 : 지방세연구원(2023. 1.)

2.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분권 방향

- 수도권 중심의 국토 공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수도권 입지규제, 과밀권역 중과세, 혁신도시 조성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는 양상
- 지방세의 분권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 중 하나는 지역 간 세수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일 것
 - 문재인 정부가 공동세 성격을 띠는 지방소비세 확대 중심의 재정분권을 추진한 것은 이를 감안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분권 정책에 지방세자율성 확대라는 실질적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자립적 균형발전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
 -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기업투자 유치 등 지방 주도의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
- 지방세자율성 확대를 위한 조례감면·탄력세율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 첫째, 조례감면과 탄력세율 인하 적용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보통교부세 산출시 조례감면 확대와 탄력세율(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인하에 따른 자체노력 페널티가 100% 및 200%로 부과되고 있어 보통교부세액 감소를 야기하는 상황
 - 이는 지방세를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조례감면 확대 및 탄력세율 인하적용에 따른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기초수요액+보정수요액 감소를 상쇄하는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둘째, 감면총량제 완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감면총량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감면액을 행정안전부가 정한 일정 수준(지방세징수액의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자율성을 제약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조례감면 규모를 결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셋째,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 제한이 완화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의 세율을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해당연도에 한해 조정할 수 있어 조례위임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
- 이는 노무현정부 시기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탄력세율을 인하여 정부의 보유세 인상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자율성을 크게 제약함

○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 조례감면 제한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을 확대할 수 없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모호성이 존재하며 감면확대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관계로 조례감면의 공간을 협소하게 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인지방소득세 특례를 소득세 특례를 준용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이 선점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 특례는 배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확대금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 소득세 특례 대상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조례로 감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확대 금지규정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조례감면의 공간을 넓히는 방안의 모색

○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세액 계산 순서상 산출세액 단계에서 세액을 조정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

-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산정되는 단계는 ‘산출세액 → 총부담세액 → 납부세액 → 안분세액’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리고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조정해 계산한다. 이와 관련해, 현행 제도에서 법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조정분은 납부세액 단계에서 반영되는 것이라 이해된다.
- 그러나 이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과 세액감면이 동시에 발생하는 때의 세액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 세액감면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이때의 산출세액에는 탄력세율 가감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탄력세율과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가능토록 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율 조례조정(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액 가감액은 산출세액 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여섯째, 법인지방소득세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

-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에 부과되는 관계로 기업의 투자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목이다. 그러나 현 법인지방소득세수는 법인세수의 10분의 1 수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유인이 작을 수 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감면과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확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법인지방소득세 확대의 필요성이 지지된다. 만일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대한다면, 세수중립 하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출처 : 지방세연구원(2023. 1.)

3.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정비에 따른 세입 영향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개정을 통한 체납징수 절차의 명문화와 간접강제제도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한 제도개선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징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도입 성과 및 한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제·개정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체납징수 절차가 명확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징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이와 더불어, 지방세외수입 전담 조직의 신설 및 확충, 표준적인 업무 매뉴얼의 도입,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징수 실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비용 절감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짐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규모가 증가하고 체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방의 자주재원이 확충이 이루어져 옴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간접강제제도의 도입, 체납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뿐 아니라 징수 전담 조직을 통한 업무의 연계·협력 강화, 정보화 시스템의 운영, 징수율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등 효율적 징수를 위한 시책 마련이 동반되어야 함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적극적 징수를 통해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과년도 체납분(지난 연도 수입)의 적극적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Ⅲ. 정책분야(10건)

1. 2023년 10대 농정이슈 및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현안

◆ 2023년 10대 농정이슈

-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안정 대책 마련
-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과 달성 전략 수립
- 다각적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개편 추진
-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 정책의 혁신
- IPEF¹⁾ 참여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마련
- 농산물 유통디지털화 진전
-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 확대
-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
- 2030 NDC²⁾ 감축 로드맵 이행 조치 및 기후변화 적응 강화

◆ 2023년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현안

- 국제 곡물·국제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증가
 - 국제곡물과 국제원유 가격은 2022년과 같은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축산·시설원예를 비롯한 농업생산 전 부문의 경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신규 투자 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시중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 정책자금의 이자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농산물 판매가격은 생산비를 고려해 농가가 결정할 수 없고 경매 등을 통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생산비 증가를 판매가격 상승

1)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세계 인구의 32%, 세계 GDP의 41%를 차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태지역 경제·통상협력 체제임.

2)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자발적 감축기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 2030년까지 얼마의 온실가스를 감축할지 세우는 중간 목표를 의미함.

으로 전이시키기 어려움. 농가의 구입가격은 상승하고 농가의 판매가격은 상승하지 못하여 농가 교역조건 악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큼.

-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장기 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기존의 영농을 유지할 수 있는 단기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식품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 식품 접근성 악화

- 국제곡물 가격과 환율 상승 등으로 식품의 원료 가격이 상승하여 식품 제조 업계에서는 가공식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외식 부문의 가격 또한 인상되어,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시기에 비해 큰 폭으로 식품 물가가 상승함.
- 경기 위축으로 가구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금리 인상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수 있어 식품 소비가 위축될 수 있음.
- 소득이 정체되고 식품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화됨.

○ 인구 감소,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에 의한 농촌 위기 지속

-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2.32명)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신생아 수 감소와 총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전반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농촌의 청년층이 도시와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도시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농촌 인구 과소화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 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등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 중의 하나임.
-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과소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이며,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윤석열 정부 농정의 본격적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농정 지표로 설정

- 튼튼하고 굳건한 식량주권, 혁신하고 성장하는 역동적 농업, 두텁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전망,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등을 농정목표로 설정
- 농식품부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삶의질향상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농정 추진체계 전반의 혁신이 이루어짐.
- 농업·농촌·식품산업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투입 계획이 수립되는 등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다양한 농정이 추진될 예정

○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신규 입법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부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과하면 농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됨.
-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이 추진 중이며, 농촌 공동체 재건에 필요한 지원, 이를 위한 인력 육성 등 농촌지역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논의되고 있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조기 확대
- 기업간 거래 등 대량의 농산물을 거래하는 디지털 농산물 거래소의 설립·운영과 관련 법령 재개정 예정

○ 다양한 중장기 농정 전략 과제 추진

-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신규 육성’ 정책 추진
-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시설원예·축사 스마트팜 확대
- 푸드테크 원천기술 확보, 거대 신생 기업 육성 등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 추진

- 스마트 APC³⁾ 확대, 온라인 거래소 출범, 오프라인 도매시장 효율화 등 농산물 유통 선진화 방안 추진
-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해외농업 자원개발, 종자산업 육성, 재해보험 발전,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로드맵 등 다양한 중장기 전략 과제 추진 예정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농정포커스 제213호(2022. 12. 29.)

2. 광역철도 및 대중교통 기술 동향

- 광역교통 정책은 광역교통망의 확충과 서비스 첨단화·고급화를 지향하고 있음
-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광역철도 및 대중교통시스템 기술을 검토하여, 사업 구간에 적합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

▶ 광역교통 수단 기술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담당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기공식, 2019년 착공, 2024년 개통(삼성역 무정차 통과 등), 2028년 완전 개통 예정임. GTX-C의 경우, 2021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 진행중
 - GTX-A 노선에 투입될 전동차는 2차레(1차:120량, 2차:40량) 발주를 거쳐, 현대로템이 160량을 모두 공급할 예정 (* 설계목표 속도는 200km/h, 운영최고 속도는 180km/h, 표정속도는 100km/h)
 - GTX-A 전동차는 광역철도 대심도를 운행하는 고속형 전동차로, 동력분산식 차량 기술¹⁾, 기밀(氣密) 등 소음·진동 관리 기술, 객실 내 이산화탄소 조절 기술이 적용되고, 자동열차제어장치 및 LTE-R 전용단말기가 설치됨

3) 스마트 APC(Agricultural Product Complex, 농산물유통단지)는 로봇, 센서, 통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해 농산물의 저장,선별, 포장 등의 기능을 자동화하는 유통단지임

○ (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 Super BRT, S-BRT) 2019년 4월 출범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첨단 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S-BRT)를 도입하여, 시민이 편리한 출퇴근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BRT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전용차로의 불연속성, 일반 차량과 동일한 수준의 신호 교차로 대기, 정류장 처리 용량 한계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신속성, 정시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정류장 출도착 운영계획 기준 2분 이내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S-BRT 기술을 개발하여, 세종시에 실증 운영하였음.

- S-BRT의 4대 주요 기술

	
<p>① S-BRT 통합운영관제시스템</p>	<p>② S-BRT 양문형 전기굴절버스</p>
	
<p>③ S-BRT 폐쇄형 정류장</p>	<p>④ S-BRT 우선신호 시스템</p>

자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22

- (노면전차, tram, streetcar) 트램은 철도와 함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 세계 388개 도시에서 운행 중이며, 현대식 트램은 프랑스 낭뜨(Nante)에서 대도시권 교외지역 중심 간 연결과 대규모 신개발지역으로 접근성 확보를 위해 건설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함.
 - 독일, 호주, 이탈리아는 전통적인 트램 국가로 폐지된 기존 노선 복구와 노후화된 시설 교체를 중심으로 전개하였고, 미국은 도시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트램을 추진
 - 국내의 경우 서울(위례), 대전, 부산, 경기(화성) 등 지자체에서 도입을 준비
 - 무가선 전기트램은 우리나라의 고밀도 도심개발 지형에서 가선 없이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R&D를 통해 개발되었고,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 종합시험선에서 시승 가능.
 - 수소전기트램의 경우 2020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함께 현대로템에서 선보였으며,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를 조합한 방식으로 수소충전을 통해 충분한 주행거리 확보가 용이.
 - 2023년 말까지는 울산시 유휴선로에서 실제 주행을 통해 수소전기트램 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
 - 해외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중국 CRRC 칭다오가 '15년 최초의 수소 전기트램 Skoda15T 발표 후 '19년 영업운전을 시작하고, 미국 TIG/m이 '21년 수소전기트램 Coast Futura 프로젝트를 시연
 - 트램-트레인은 트램을 일반 도시 간 철도노선에서 달리게 하는 궤도 수송 시스템이며, 1992년 독일 카를스루에 지방에서 처음 운영하였음
 - 외곽지역과 도심을 잇는 방식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적합한 방식이며, 2022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트램-트레인 국내 도입을 위한 직결운행 핵심기술 사업”을 국가R&D로 추진하여, 2024년 12월까지 연구개발을 완료할 예정임.
 - 전국 유휴노선 및 폐선을 활용하여, 비수도권 광역교통 네트워크 효율을

제고 및 이동성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 중이나, 국내에서는 직결 운영을 위한 기술력 확보 등 경험 및 선례가 없어, 관련 기준 및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광역교통 계획운영관리 기술

○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수요분석 시스템, TRIPS 2.0)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기관 고유사업으로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수요분석 시스템(TRIPS 2.0)을 기술 개발하고, 꾸준히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음.

- 기존 교통수요예측의 정밀도 확보를 위해, 현재 이용 중인 교통카드 DB를 활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노선 변경 등 단기간 예측이 가능하며, 광역교통수단과 도시내 교통수단과 연계·환승 등 상세 분석이 가능.



○ (환승센터 스마트 통합운영시스템 설계) 서울시는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 배치 기준」에 의거,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스마트 통합운영시스템 설계” 용역을 진행하여, 설계 단계부터 운영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

- GTX-A, GTX-C, 지하철 2호선, 9호선과 위례신사선이 환승하는 삼성역 일대를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 2017년 기본계획을 시작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
- 일반적으로 광역철도를 포함한 다수 수단과 노선의 환승이 이뤄지는 물리적인

공간은 운영기관별 관할 구역이 정해져 있어, 한정적 공간에 대해서만 책임 운영되므로 운영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음.

- 운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규모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 운영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 디지털 기반 신속 정확한 협력 체계는 필수 불가결함



○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M-DRT) 의사결정 정책지원 시스템) 모빌리티 전환기술 중 하나인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은 민간 모빌리티 기업을 중심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음.

- 향후 대중교통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진화시키며, 법제도, 서비스 지역 등 경계를 허무는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영역이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민간의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수적 요소임

- 국가 R&D인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2022-2025)”에서는 M-DRT 의사결정 정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토부 대광위의 한정면허 인면허권 승인관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 관리(적정 탑승 인원, 노선 우회도 최소화, 적정 요금), 쉼 관리 대상노선 운행실적(성능지표) 위클리 분석, 노선신설 등 정책변화에 따른 단기 수요변화 예측 등 기능이 구현될 예정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Brief (2022. 12. 특별호)

3.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 보도자료

주요 내용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에는 시범운영 등을 통해 우수 모델을 발굴하는 등 철저히 준비 • 2024년부터 전국 확산 및 현장 안착 주력 	
《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 》	
① 학생맞춤 교육개혁	(1)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2)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3)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② 가정맞춤 교육개혁	(4)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보육 통합 본격 준비 (5) 늘봄학교 도입 → 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운영
③ 지역맞춤 교육개혁	(6) 과감한 규제혁신 및 권한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7) 5개 내외 지자체와 라이즈(RISE) 시범 추진 및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 지역과 함께 글로컬(Glocal) 대학 육성 (8)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④ 산업·사회맞춤 교육개혁	(9) 국가차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 본격 운영 -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 순차 발표
입법	(10) 교육개혁 입법화 추진 -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러닝메이트제 도입) - 교육자유특구 근거 법령 마련,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월 5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보고했다.
- 교육부는 2023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국정 과제 점검회의(2022.12.15)에서 밝힌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윤석열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①우리나라 성장을 위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②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 2023년부터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 교육개혁

(1)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방법 혁신

-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Courseware)*를 운영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1월에 수립해 발표한다.
 - * 교과과정(Course) + 소프트웨어(Software) 합성어.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목적으로 바람직한 교수환경 또는 수업 조건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 또한,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test bed)를 확대하고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상반기 내에 수립한다.

(2) 학교 교육력 제고

- 학교 수업·평가 혁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지역의 다양한 우수학교 육성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 교실 수업 및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2월 중 수립하고, 프로젝트 토론형 수업, 인공지능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실 수업 혁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한다.
- 공교육 혁신의 선도모델로서 국립고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며, 고교 다양화 등을 통해 모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3) 교사 혁신 지원

- 교사들이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1월 중 구성해 미래역량 함양, 교육현장 연구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 교원양성과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한다.
- 교원이 학습혁명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 교원 단체들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행정 업무경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8월까지 마련한다.

2 가정맞춤 교육개혁

(4) 유보통합 추진

-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한다.
-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1월에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
-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관리 체계 통합방안**’을 상반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을 하반기에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5) 늘봄학교 추진

-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돌봄(Educar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를 본격 추진한다.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신수요 프로그램과 문화, 체육, 예술 활동 등 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침돌봄·틈새돌봄·일시돌봄 등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며 운영시간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학교·교원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고, 전담인력도 지원한다. 올해는 4개 내외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인력과 재정을 집중 지원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3 지역맞춤 교육개혁

(6) 규제혁신·권한이양 및 대학 구조개혁

-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학사 규제, 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폐지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 평가인증을 활용하여 일반재정을 지원하며, 경영위기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한다.
-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연내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추진한다.

-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 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대폭적인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
- 우선, 2023년에는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 이에 따라,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특성화를 통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Glocal) 대학**을 육성하여, 지역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8)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초·중·고, 대학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조성**한다.
-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자원 확대,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해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을 2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 특히, 늘봄학교(교육부), 도시재생사업(국토부), 공공기관 이전(균형위) 등 **부내외 다양한 정책과 연계한 학교시설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4 산업·사회맞춤 교육개혁

(9)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심 첨단분야 인재**를 육성한다.
-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 를 2월에 출범하여 범부처 인재양성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 작년의 반도체, 디지털에 이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10)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

- 끝으로, 국가와 지역 성장의 동력인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개혁과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 지역에 보다 더 다가가는 교육으로 변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운 **교육자유특구**의 안정적 도입과 운영을 위해 **근거법령 마련**을 추진한다.
-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충분히 보장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30년을 내다본 **미래지향적인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 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으므로, 교육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하겠다.”라며,
- “**교육개혁에는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이므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교육부 누리집(2023. 1.)

4. 충남교육청 2023년 미래교육 추진계획 발표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교육 5대 정책 방향**에 따른 **2023년 미래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 행정** 등의 **충남교육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중점 사업을 보면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과 관련해 충남형 미래교육 평가체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 을 올해 9월 설립해 미래교육 평가체제를 전담하고, 초중고 교육과정 및 평가 방향 등을 새롭게 설정한다.

또한 충남형 IB교육과정 준비학교 14개교를 운영한다. 기존에 제도를 운영하는 타 시도 교육청과 **‘공동 추진단’** 을 구성해 정보교류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력향상지원센터’** 를 올해 1월부터 설치 운영해 교실, 학교, 지역사회 연계한 충남학력 디딤돌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관리한다. 또 정확한 학력 진단과 학습 이력 관리를 위해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 지원시스템’** 을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 교육’ 과 관련해서는 충남형 미래교육통합플랫폼 **‘마주온’** 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마주온’** 에 교육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의 서술형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며, 가상 누리터 기반의 인공지능교육 수업 활동 자료를 담는다.

또한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를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 조성하며, 인공지능교육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14개 시군에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분야를 위해 따듯한 언어문화 확산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중심의 생활교육을 정착시킨다. 이를 위해 인성 공감 36.5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어울림톡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단-예방-지원-치유’** 의 단위 학교 학교폭력 근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한 자아성장을 위해 올해 3월 1일자로 **‘학생정신건강 증진센터’** 를 설치, 운영한다. 아울러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시민 양성을 위해 도내 10개 학교에 특색있는 숲을 조성해서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자연생태 학습장을 20곳을 만들어 다양한 생태학습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과 관련,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을 설립하며 (구)홍북초등학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과 야외체험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학교 내 교무업무 지원팀 전담 교사의 수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행정 기관의 학교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지원 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2023학년도 저소득층과 다자녀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를 1인당 초등학생 16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을 지원하며 다자녀 학생 가운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2024학년도에는 수학여행비와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 을 위해서는 2023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정원 기준을 23명으로 낮추고 2026년까지 20명을 목표로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을 추진한다.

- 김 교육감은 “공약 이행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쳤다” 며 “신규사업 31개, 계속·확대 사업 34개로 구성된 65개 공약은 이행 계획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착실하게 추진하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2023년 한 해, 섬마을 분교장부터 과대 학교까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망원경으로 멀리 보고 현미경으로 촘촘히 챙기면서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충남 미래 교육을 활짝 꽃피우겠다” 고 덧붙였다.

출처: 중부매일(2023. 1. 10. 기사)

5. 교육부 2023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

□ 추진 배경

- 일본 정부는 초·중·고 학습지도요령(교육과정 지침)과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관련 영토주권침해 기술 및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지속

< 일본 검정 사회과 교과서 內 독도 영토주권 침해 기술 현황 >

- (기술 내용)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 등
- (기술 현황) △초 사회 교과서 12종 중 10종(83.3%) ('19.3.), △중 사회과 교과서 17종 중 17종(100%) ('20.3.), △고 사회과 교과서 독도 관련 기술 50종 중 50종(100%) ('21.3., '22.3.)

- 변화된 교육여건에 따라 학교 독도교육을 내실화하고, 국내·외 우리 영유권 수호를 위해 체험 중심의 독도교육 지원 및 홍보 강화 필요

⇒ 학생과 교원의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외에 '우리 땅 독도'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 2022년 주요 성과

- 시·도 및 학교별 '독도교육주간' 을 자율 지정·운영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 실시
 - 독도 교수·학습 자료 제공 및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개최 등 학교 현장의 독도교육주간 운영 지원

< '22년 독도교육주간 운영 지원 내용 >

- (교수·학습자료) 독도 디지털교재, 자기주도학습 콘텐츠, 독도 VR콘텐츠 등 54종 제공,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독도 안내서」 제작·보급(독도홍보협의회, '22.7.)
- (온라인 프로그램) 학교급별 체험 중심의 다양한 대상별·계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 '이사부와 나무사자'(7,064명), '오늘은 내가 관광'(18,432명), '자유학기연계 진로·문화체험'(11,373명), 가정의달·독도의날·여름방학·겨울방학 등 계기별 프로그램(946명) 등
- (찾아가는 역사·독도 강좌) 동북아 역사와 동해·독도 관련 현안에 대한 청소년의 역사 인식 함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온·오프라인 전문가 강좌 운영(49개교, '22.4.~10.)
-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대구·경북·강원 등 지역 학교와 기관 대상 독도전시회 개최(50회)

- 학생이 스스로 독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교 현장의 독도교육 내실화 지원

※ 에듀넷·티-클리어, 동북아역사재단 누리집 탑재 (‘23.2.예정)

개발 형태	주요 내용	사진(예시)
독도 AR 콘텐츠 (1종)	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 학생이 독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캐릭터가 독도의 자연, 역사 등에 대해 알려주는 실감형 스토리텔링 콘텐츠	
메타버스 독도 콘텐츠 (2종)	초·중등학생이 흥미를 갖고 독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ZEP) 기반의 콘텐츠 ※ 메타버스 독도체험관을 관람하며 다양한 게임에 참여	
독도교육 포스터 (2종)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근거를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학교급별 포스터 및 해설 자료 ※ 초등 1종, 중등 1종	

- 학생과 국민이 독도를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독도체험관 신축 추진 및 확장·이전 재개관

※ 부산교육청 독도체험관(‘23년 개관 예정),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22.10.25. 재개관)

- 독도 전시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시·도별 독도체험관 운영 담당자 및 전시해설사 협의회(’ 22.10.11.)를 통한 전문성 강화 지원

- 초·중등 교원 대상 집합연수를 통한 독도 탐방 및 원격연수 운영으로 독도 교육 전문성 향상

- 독도교육 연구학교(초 2교, 중 1교), 독도지킴이학교(초 35교, 중 43교, 고 40교) 운영 등 학교 현장의 실천적 독도교육 지원

< '22년 독도교육 연구학교 운영 사례(초) >

-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연구주제) 맞춤형 교과 연계 독도교육을 통한 「독도럽(L.U.V.)」 역량 기르기 △(운영중점) 독도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구성원 역량 강화, 교과 연계 수업 구안·적용 및 PBL 프로그램 개발·운영, 운영 사례 공유·일반화
- (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 △(연구주제) 「EAST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독도사랑 마음 키우기 △(운영중점) 독도교육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 및 역량 강화 연수, 교육과정 분석 및 재구성, 주제 중심 교과통합 프로젝트 교육과정 운영,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 '22년 독도교육 연구학교 운영 사례(중) >

- (충북대사대부설중학교) △(연구주제) 역지사지(歷地社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과 연계 독도교육 활성화 △(운영중점)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공동체 연수,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교육과정 편성 및 융합·블렌디드 교육 운영, 학생자치회 중심 독도교육 전개

< '22년 독도지킴이학교 동아리 운영 사례 >

- “독도 뉴스레터 제작·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도 독도에 대한 잘못된 자료를 발굴하여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위례초등학교 동아리 ‘독도미래로’)
- “지구촌 빈곤 지역 아이들에게 독도 필통을 보내 꿈과 희망을 갖도록 돕고, 우리땅 독도를 홍보하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이현중학교 동아리 ‘독도사수대’)
-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독도수업모델을 개발하고 교과-진로-융합-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의 독도 영토주권의식을 확립했습니다.”(영남고등학교 동아리 ‘장한 독도대원들’)

□ 2023년 개선 방향

- (해외 교류수업 지원) 학교 독도교육의 외연을 확장하여 해외 학교와 온·오프라인 공동수업을 통한 역사교류 기회 제공
 - ☞ 해외 역사교류 지원 사업(특교 8억)으로 우리나라와 해외 학교간 1:1 결연을 통한 상호 문화·역사교류 활성화 지원
- (독도체험관 운영 활성화) 독도체험관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등 시·도 간 운영 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연계 운영 활성화 도모
 - ☞ 독도체험관 개선 사업(특교 6억)으로 노후화된 전시물을 확충하고, 신규 개발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은 시·도별 체험관에 공유
- (학교 독도교육 내실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지역별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및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독도교육 지원
 - ☞ 학교 여건에 따른 독도교육주간 자율 운영, 학생의 학습 주도성과 맞춤형 교육과정 기반의 연구학교 운영 및 독도동아리 지원 강화
- (지원체계 강화) 독도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부처·민간 협력을 통한 교육·홍보 정책 논의
 - ☞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 독도 관련 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 및 홍보

□ 추진 내용

목 표

세계 속의 '우리 땅 독도'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독도교육 활성화

추진 과제


국내·외 독도교육
인프라 구축

- ① 시·도교육청 독도체험관 개선
노후화 된 시·도별 독도체험관 전시·체험 콘텐츠 확충
- ②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운영
국내·외 관람객 대상 독도 전시 및 체험, 전문해설 제공
- ③ 해외 온·오프라인 역사교류 활성화 지원
우리나라와 해외 학교 간 1:1 결연을 통한 교류수업 지원


학교 독도교육
내실화

- ④ 독도교육주간 운영
연중 한 주를 선정하여 집중적·체계적 독도교육 권장
- ⑤ 독도지킴이학교 운영
전국 초·중·고 120개 학교 선정, 운영비 지원 및 시상
- ⑥ 독도교육 연구학교 운영
'주제 중심의 교과 통합 독도교육 방안' 마련


독도교육
지원체계 강화

- ⑦ 독도교육 역량 강화 연수
교원 독도탐방 및 원격연수, 독도전시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 ⑧ 독도교육정책 네트워크 강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협업을 통한 독도교육 정책 논의
- ⑨ 대국민 독도사랑 홍보 강화
대상별·계기별 교육 프로그램, 국민 참여형 이벤트 등

출처: 교육부 누리집(2023. 1.)

6. 지역인구 감소시대, 지역과 대학의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

- 지역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처한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대학의 결합모델을 찾아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제시
 - 첫째,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인구변화 속에서 지역과 대학이 처한 위기의 원인과 내용을 살펴본다. 현재 지역과 대학 위기의 원인이 청년층의 유출에 따른 지역 불균형에 있으며, 대학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서 위기 극복의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 둘째, 지역인구 감소시대에 지역과 대학이 연계·협력을 넘어 결합하게 된 배경을 검토한다. 지역과 상생을 강조하는 대학패러다임으로 인해 대학의 기능 및 역할, 대학캠퍼스의 활용이나 지자체의 역할에 변화가 필요함을 밝힌다.
 - 셋째, 지역과 대학의 결합을 통해 대학에 새롭게 부여되거나 확대되는 역할 또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다. 지역과 대학 결합의 유형은 대학의 기존 핵심기능이 확정되는 모델로 일자리형과 교육형을 살펴보고, 대학에 신규기능을 도입하면서 지역과 대학이 결합하는 모델로 주거형을 살펴보았다. 각 결합 모델의 등장 배경 및 현황과 결합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각 결합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넷째, 지역단위에서 지역과 대학의 결합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사례지역을 통해 살펴본다. 인구감소와 청년층 유출이라는 지역과 대학의 공통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단위에서 대학과 지역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토한다.

○ 정책제안

- 대학이 보유한 기능뿐만 아니라 시설을 도시 및 지역의 문제해결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과의 협력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대학과 지역은 연계와 협력을 넘어 결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대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자체 책무성 확보, 지역 이해당사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학간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지역대학 육성 기본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률에 지역대학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일자리형 모델**의 도입을 위해서는 대학 중심의 기업가적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의 산업기반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 중심의 기업가적 생태계에서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 학교기업, 기업연구소의 입주 등을 통해 대학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정책 사업에서 독립하여 자립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교육형 모델**의 도입을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내 대학 상호간에 자원을 공유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 이외에도 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또한 교육형 모델의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에 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대학운영법인’ 설립 및 재원 확보,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 **주거형 모델**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대학 캠퍼스 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UBRC를 설립할 수 있는 유희부지와 대학의 전문성 및 자원 보유 여부, 입주대상 선정,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원(2023. 1.)

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

○ 자치행정의 보장과 지방재정위기의 관계

- 헌법상 보장된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충분한 재정적 권한이 보장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등의 자체수입보다는 국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에 의존하는 등 지방재정에 있어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향후 세입감소 및 세출 증가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재정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으며, 종국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자치행정의 실현을 저해할 수 있음
- 주민의 측면에서는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주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내용적·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검토 필요성

-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및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현행 「지방재정법」은 다수의 지방재정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을 기준으로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사후적 지방재정관리제도로 구분됨
-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로는 지방재정 운용의 계획성 확보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복투자 및 무분별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및 무분별한 지방채발행을 관리하기 위한 지방채발행관리제도(총액한도제)가 있음
- 사후적 지방재정관리제도로는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재정위기단체지정제도, 긴급재정관리단체지정제도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제도들은 지방재정위기 발생의 예방과 극복에 직접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 해당함

- 개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개별 제도에 대한 일정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재정분석을 위한 지표가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평가를 위해 적절한지 의문이 있으며, 재정위기단체 및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나아가 전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성 확보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개별 제도 간 관계에 관한 분석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관계 행정규칙 등 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위기

- 연도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낮음. 이는 OECD 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임
- 반대로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됨
- 출생아 수의 감소는 향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생산연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그리고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는 세출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에서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의 발병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 정책, 국내외 경기침체 및 법인의 실적 부진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악화와 지출 및 채무의 증가로 이어져 지방재정위기의 발생을 야기할 수 있음

○ 개별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 지방재정분석제도 관련 분석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재정효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자체수입비율(증감률)은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을 지방재정의 운용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대해 의문이 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 및 코로나19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예외적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유동적일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재정분석의 지표 및 방법의 개선이 요구됨

- 또한 지방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는데, 재정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지표 중 일부는 보통교부세의 교부에 있어서도 고려되기 때문에 중복성 측면에서 지적이 가능하며,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재정진단과 관련해서는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진단을 받게 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고 판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재정위기단체지정제도 및 긴급재정관리단체지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및 정부의 정책 등이 지방재정위기의 발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재정위기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건전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 또한 전체 지방재정관리제도에 있어서 국가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 있어서 그 역할은 보다 강화되는데, 헌법상 보장된 자치행정의 본질을 고려하여 국가의 개입을 지양하고, 의회 및 주민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체계 재정립 방안

-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험점검제도는 동일하게 재정진단과 연계되는 제도이긴 하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 재정분석제도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 경우 제도의 명칭을 ‘지방재정 운용 평가 및 인센티브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음
- 전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체계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 위기관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재정위험점검제도, 재정진단제도,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 및 긴급재정관리단체지정제도를 순차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의 개정이 동시에 요구됨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2022. 10.)

8.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인구소멸위기 지역 인구구조 변화 추이 분석 및 관련 이론 검토

- 인구소멸위기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실태와 변화 추이를 검토하고, 관련 이론적 논의를 하였음. 또한 현행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을 분석하였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간의 연계·협력 사례들을 수집·분석하였음. 그리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현황 파악과 중앙부처 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인구소멸위기 지역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분석

-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와 인구소멸위기 지역의 지자체 조례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관련 법 및 조례의 문제점과 제한점을 파악하였음. 이를 통해 향후 인구소멸위기 지역 관련 법·제도의 개정 방향과 정책 추진 방식 전환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국내·외 사례 수집 및 분석

- 국내 사례의 경우 경남 고성군, 지리산 권역, 충남 논산시, 충북 옥천시 등 총 4개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민·관 전문가, 공무원,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실시하였음. 해외 사례는 일본과 덴마크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 청소년 및 전문가 의견조사

- 인구소멸위기 지역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의견조사는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서면조사를 통해 제안된 내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FGI를 통해 진행하였음.

○ 인구소멸위기 지역 청소년정책의 전환 방안 마련

- 지역 언론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콜로키움,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협력 사례 발표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였고,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지원)청 담당자들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를 진행하였음.
- 이상의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 비전을 설정하였고, 3개의 정책목표와 4개의 정책과제 그리고 1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하였음.

핵심 정책제언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9. 지방자치단체 부패실태 및 제도적 취약요인 분석

○ 지방자치단체 선출직·고위직 부패의 발생원인 사례 분석

- 내부통제 거버넌스 미흡에 의한 부패

- (기관장의 직원 부당 채용)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기관장은 지방의회의원의 비서가 해당 기관의 경력직에 응시하자 서류전형에 부당하게 관여하여 자격요건을 무마시킴
- (지방의회의원의 보조사업 부당 추진) 의원의 제안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사업을 부당하게 변경하고 의원이 청탁한 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타당성 검토 미흡에 의한 부패

- (기관장의 직원 부당 채용)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에 대해 합리적 근거없이 일괄전환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채용절차를 부당 운영
- (지방의회의원의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강진군은 지방의회의원의 청탁을 받은 업체가 계약제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 체결

- 재량권 남용에 의한 부패

- (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 남용) 구리시장은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불법건축임을 알면서도 지도·단속을 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지시
-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남용) 충청남도 15개 시장·군수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부담금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하고 사적 목적에 사용

○ 감사시사점

- 정책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공무충실성(integrity) 점검 방향

- 지방자치단체 선출직·고위직 부패는 조직 전체로 부패행위가 확산되는 등 파급력이 큼.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에 의한 지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부패 수행자는 하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조사 시 고위직에 대한 처벌은 요원

- 지방자치단체 고위직 부패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정책 의사결정권자의 부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착하기 쉬운 부패부터 순차적 접근이 필요

〈정책의사결정권자의 공무충실성 점검 내용〉

구분	주요 점검 내용
타당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법령을 위반하여 추진되었는가? - 채용·승진·성과평가, 인허가, 계약, 보조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용기준, 추진방법이 적법한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가? - 상급기관에 의한 신규 정책의 경우 기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세부 실행방안이 마련되었는가? - 계약업무 추진 시 수의계약 제한 요건 등 확인을 위한 서류요청 및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재량권 남용 (부정청탁)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해 내·외부의 민원·청탁이 있었는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추진할 경우 특정인·단체에게 특혜를 주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내부통제 거버넌스 체계	지방자치단체장·고위직이 정책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을 견제·통제할 수 있는 조직 내부통제기구(위원회)의 참여가 있었는가? - 조직 내부에 정책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는가? - 정책의사결정 견제·통제기구(위원회)에 제공되는 정보가 은폐·조작되었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조직 내·외부의 타 부서(감사부서, 예산부서, 인사부서, 재무부서 등에서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인사, 인허가, 계약, 보조금 등 업무에 대해 조직 내외부의 부서에서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있는가? - 인허가 업무 추진 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가? -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가 객관적 근거에 따라 예산을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에서 검토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한 내·외부의 타당성 검토 의견이 실제 업무 추진 내용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지방자치단체 부패방지체계의 점검 방향

- 지방자치단체 부패 근절을 위해 자치단체 부패방지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접근방법이 중요하며, 여기에서는 내부통제장치 개선 측면에서 점검방향 제안.
- (법령상 위원회의 적정한 구성·운영) 정책의사결정자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자치단체 내부에 구축하고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인사·인허가 등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분야에서 정책의사결정자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자체감사기구의 상시 모니터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 되어 있지않은 경우 자체감사기구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는지 확인

출처 : 감사연구원(2022)

10. 고향사랑기부제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

○ 고향사랑기부금제 경과와 주요 내용

-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포함 시키면서 본격 논의가 진전됨
- 2021년 10월 제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법이 통과되고,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임

- 첫째, 도입 목적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 둘째, 기부자 : 본인 주소지 외 모든 자치단체 가능. 법인은 기부 불가
- 셋째, 기부금 상한액 : 개인 연간한도액 500만원 및 자치단체 모금한도액 없음
- 넷째, 답례품 증정 : 조례로 정하여 기부액의 30%까지 가능
- 다섯째, 기부금 운용 : 기금 설치하여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해야 하며, 기금액의 15% 이내에서 운용비용 충당
- 여섯째,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부터 16.5%를 세액공제

○ 일본 고향납세 제도의 성공경험

- 재난재해에 대한 기부금의 증가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절차간소화 등 제도개선
- 답례품 제공에 따른 기부금액 증가

○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쟁점

- 기부금 사용 자율성 확대 : 자치단체 자율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기부금 세액공제액 규모 : 제도 활성화 위해 상향조정 필요(20만원 이상)
- 답례품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40%로 상향조정 필요

○ 맺는 글 : 활성화 과제

- 첫째, 명확한 정책목표의 설정
- 둘째, 조례를 통한 투명한 사업 운영 및 지역 현안사업 발굴
- 셋째, 기금재원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 고려

출처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2022. 12.)

IV. 법률 제·개정(1건)

1.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은 12월 23일과 28일 2번에 걸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12월 23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15개의 조세 법률안 중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2개 법률안은 수정 가결, 「개별소비세법」 등 3건은 원안 가결
- 12월 28일: 「농어촌특별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2건의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 의결된 법률안은 2022년 12월 31일 공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주요 심의 쟁점) 법인세 세율 인하

-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및 고용 증가의 효과성 유·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
- 여·야 합의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대비 1%p 인하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 금융시장 불안 최소화를 위해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자본소득과세 합리화를 위해 과세할 필요성이 높다는 견해가 대립
- 여·야 합의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한 세부담 완화 필요성과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상충
- 여·야 합의로 2주택 이하 기본 세율 적용,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 중과세율 적용

○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 기업승계세제 확대가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투자·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견해와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조세회피에 악용 가능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대립
- 여·야 합의로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을 최고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23. 1.)